

한덕수 '광주사태' 맹폭... "화난다, 5·18 모르는 호남사람"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칭한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월단체가 비판했다.

강 시장은 4일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자꾸 광주사태, 광주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며 참 부끄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후보! 광주사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입니다. 법에 그리돼 있지요"라며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걸조차 모르는 '호남사람',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나네요"라며 한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꼬집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도 공동성명을 내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고 국화와 헌법재판소·국가기관이 이미 확정된 민주화운동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 "한 후보는 평소 5·18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기 위해 기억의 현장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후보가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내란동조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 5·18의 정신을 이해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을 향한 참배에 나서던 중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돌아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읊소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도, 오월단체도 '비판' "부끄러움이 밀려와...5·18정신 훼손해" "명칭 왜곡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자 했다면 용어 하나부터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숭고한 저항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동"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들 "국정 최고책임자를 꿈꾸는 사람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며 "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헌정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물밑 협상... 11일 이전 단일화 '주목'

'공보물 인쇄' 7일 '후보 등록' 11일 단일화 시한 '거론'

김 캠프, 단일화 이전... 한 캠프 "어떤 물이든 좋다"

김·한, 5일 조계사 봉축법요식 조우... 단일화 질문 나올 듯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기 위한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일 김문수 후보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 후보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해 한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선거 공보물 인

쇄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7일까지는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후보는 4일 오후 경기 포천에 위치한 한센인마을인 '장자마을'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와 '마지노선' 관련 질문에 "아직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되면 한 예비후보와 일대일로 가는 것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포함해서 원상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 단일화 기구는 언제 구성되느냐,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 캠프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두고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한 측은 주장과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적극적인 한 김 후보 측 인사는 "약간의 진통은 원래 있는 것"이라며 "7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건 선거 공보물 인쇄 때문인데 당 사무처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7~9일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답판은 양보하기도 어렵고 정당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에 대해 '어떤 물도 좋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선거 공보물 인쇄 일정 등을 고려해 7일을 1차 마지노선으로, 대선 후보 등록일인 11일을 2차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을 고려하면 7일이 (1차) 마지노선"이라면서도 "공보물을 여러 인쇄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루 이를 연기해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 등록일인 11일이 (2차)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면서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장기화되면) 힘이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하루아침에 (후보직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김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조희대 탄핵 결정 보류" "이재명 탄핵 결정 보류" "이재명 탄핵 결정 보류" "이재명 탄핵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의결은 보류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뉴시스

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대한 법 개정, 대법관 수 증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뉴시스

곡성군 |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일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